

## 대한민국 2016년 인권보고서

참고: 본 보고서는 2017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F. 정오표를 참조한다.

### 개요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관측자들은 당해 연도에 치뤄진 총선과 2012년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간주한다.

문민 당국은 보안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 등의 관련 법률들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와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부패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인 최순실은 사기, 협박,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 추문을 근거로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했다. 한편, 박근혜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는 수 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에서 대규모 평화 집회를 개최했다.

그 외의 인권 문제들로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률의 부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 매매 등이 있었다. 탈북자, 소수 민족/인종,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간성(LGBTI), 에이즈 환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제약을 가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

당해 연도 상반기에 군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수가 27 명으로 전년 동기의 24 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신병 사망률과 자살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방부는 직전 3 년간 사망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괴롭힘,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으로 알려졌다.

### b. 실종

---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국가 공무원이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었다.

2015 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괴롭힘이 군대 내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제 1.a 절 참조). 이처럼 군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외견상으로는 근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병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 년에 국방부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국방인권협의회는 7 월 현재 약 380 건의 군대 내 인권 개선 제안을 접수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6 월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약 600 명의 인권교관을 교육했으며 2019 년까지 3,000 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다.

60 개 항공사 회원들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재원과 인력을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 내에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여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위한 ‘출국대기실’을 설치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권한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자는 변호인을 접촉하거나 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 28 명이 2015 년 12 월부터 2016 년 7 월까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했다. 나이지리아 난민 신청자 1 명은 9 월 현재 10 개월 이상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6 월에 하루 평균 108 명이 출국대기실에 머물렀다. 출국대기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약 60 명이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에 침대, 샤워실, 텔레비전, 공중전화가 비치되어 있으며 대기자의 절반 가량이 입국이 불허된 당일에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특히 수개월 동안 장기 수용되는 대기자들의 경우 출국대기실의 생활 환경이—사생활 보장, 침대,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자들은 개별 항공사에 식사를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자는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만으로 해결했으며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대기자나 난민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 현황: 교도소 내 사망자들의 사망률/사망원인은 국가 평균과 전반적으로 합치했다.

행정: 관계 당국은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주장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문서화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신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구금 실태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지 않았다.

####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외국인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대상자 집단과 새로운 범주의 위반 행위로까지 확대했다.

####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

경찰청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치안을 담당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의 감독하에 출입국 및 국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문민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가정보원(NIS)은 국가 안보 및 체제 전복과 관련된 범죄나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권한과 비밀주의가 부실한 감독 체계와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노동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시위 관리에 동원되는 경찰 병력의 제복에 부착되는 명찰을 제거한 조치가 특히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 등 물리적 진압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관련된 문제를 유발한다고 논평했다.

###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 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 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법무부는 1~6 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 명이 구속됐다고 보고했다. 총 10 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9 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우성은 국내 탈북자에게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절차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유우성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15년 10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금자의 구속적부심 청구권: 형사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이용하고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정 출석권, 항소권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는 본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법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

#### 정치범

---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쟁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병역 의무 위반자 혹은 거부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국방부는 건강이나 장애 혹은 기타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비정부기구인 워치타워는 1~6월에 여호와의 증인 신자 400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7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499 명이 수감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국내 인권 기관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주요활동사항, 여행계획,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3월에 국회는 15년 전에 처음 발의된 이래로 논란을 빚으면서 입법이 무산돼온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테러 공격과 북한의 간첩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비정부기구는 이 법이 민간인의 전화를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국회의원 38명은 이 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테러 용의자뿐만 아니라 반정부 인사까지도 감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

##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 21 조 제 4 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선거법,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에 입각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도 북한을 고무 혹은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정치 지도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당국에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수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기술했다.

5 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 국적자인 신은미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7 월에 서울행정법원은 2015 년 1 월에 정부가 신은미에 대해 강제출국을 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 년간 신은미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는 효력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간주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4 월 총선 직전이던 3 월에는 나경원 여당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블로그 게시물이 게재된 지 10 시간도 안 돼 삭제됐다.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은 나경원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대입 특별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바이럴 뉴스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업체인 카카오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 경찰은 게시물의 사실 여부에 관한 심문을 이유로 1 주일 동안 매일 소환을 통보했다. 해당 블로거는 소환에 불응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고발을 취하했지만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지만 엄격한 명예훼손 법률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익에 부합하고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처벌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법률이나 규제 변경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대폭 강등했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정된 경우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윤리 규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통위가 정부나 거대 기업에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에 TF 팀을 조직해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정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2010년 이후로 일선 학교가 교육부의 검정승인을 거친 여러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율권이 사라진다.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제1야당과 합동으로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그와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으며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11월에 교육부는 한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 제시자의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추가로 논란을 유발했다. 12월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강제로 배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교과서는 예정보다 1년 늦은 2018년 3월에 채택을 희망하는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부와 공직 인사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동시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으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월에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안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 년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인터넷의 자유

---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널리 보급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게시판 같은 SNS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된다. 그에 추가하여, 서울중앙지검 전담반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 조치했다.

정부는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방통위는 북한 사이버 공작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3 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IT 기술에 관한 해외 블로그인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국가정보원은 이 블로그에 게재된 3 편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5월에 이를 기각했다.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2012 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직선거법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3 절 참조).

3 월에 열린정부파트너십은 열린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시민의 정보 접근과 부패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과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

정부가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12월에 정부는 일선 중·고등학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사용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취소했다(상기 내용 참조).

5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영방송(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KBS 홀이 4차례로 예정된 선원예술단의 공연을 취소한 결정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4월에 있었던 동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선원예술단은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 운동과 연관을 맺고 있다. KBS 홀 측은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원의 결정은 중국이 KBS (중국 내에서 방송이 허용된 소수의 방송사 중 하나)의 중국 현지 방송권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막대한 손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됐다.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상반기에만 9건의 집회를 금지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기업들이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 노조를 동원하여 사전에 집회를 신고함으로써 다른 단체들이 회사 건물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6월까지 접수된 1만 건 이상의 집회 신청 가운데 38건을 불허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 역시 평화로운 집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관측자들은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술과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례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제 7.a 절 참조)에서는 수백 대의 버스를 범퍼가 맞닿도록 밀착시켜 도로에 차벽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과격할 폭력이 발생했다. 시위대는 차벽을 부수고 통과하거나 전복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고령의 백남기는 물대포를 맞고 수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9월에

사망했다. 물대포 조작자에 대한 기소는 없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망 경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11 월 현재 유가족의 반대로 집행이 중지되었다.

6 월 15 일에 발간된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경찰에 의한 차벽 사용이 “긴장을 촉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벽이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5 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22 명의 노조원을 체포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7 월에 5 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조원 22 명은 전원이 기소됐으며 10 월 현재 6 명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다(제 7.a 절 참조). 1 월에 방한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갈수록 퇴행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사상 유례 없는 숫자의 시민이 참가한 11 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제 4 절 참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가했다.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에서 0.6 마일 떨어진 울곡로까지 시위대의 행진이 허용됐다.

## 결사의 자유

---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 c. 종교의 자유

---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http://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

국내 이동의 자유, 국외 여행(북한 제외),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주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가혹행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에 의하면 탈북자의 약 70 퍼센트는 여성이며 이들은 상당수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과 후에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경험했다. 최근 탈북자들은 OHCHR 과의 면담에서 그러한 범죄가 탈북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했다고 응답했다.

국외 여행: 방북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민에게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난민 보호

---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혹은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으며, 이들은 법률에 의해 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8월까지 약 894명의 국내 재정착을 지원했으며 이는 2015년 동기에 비해 15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는 약 3만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입국 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건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신청자는 정부를 상대로 통역과 법률적 조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6,041명이 10월 현재 망명을 신청했는데 이는 2015년 전체 5,711건에서 늘어난 수치이다.

법무부는 1994년 이래로 난민 지위 신청자 18,854명 가운데 3퍼센트(598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상당수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직원 부족과 인적 자원의 결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난민 및 망명 제도의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14명, 9개 거점 사무소당 1명씩의 난민 심사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다.

안전한 출신국/경유국: 법률은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가 포함된다.

2015년 12월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리아인 신청자 28명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이 조항이었다(제 1.c 절 참조).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국, 레바논, 터키 등 다수의 제 3국을 경유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후 수개월 동안 국내 난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리아인 26명에게 입국을 허용했다.

강제송환: 망명 희망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출입국항에서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가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규정된 농르폴망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수의 북한 출신 이주민들과 타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까지 망명 신청자에 대한 1건의 차별사례가 있었고 탈북자와 관련된 공식 차별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항구적 해결책: 법무부는 2015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매년 약 30명의 미얀마 출신 카렌족 난민을 대상으로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국인 난민 재정착 제도로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습, 사회·문화 적응 교육, 직무·학업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에 1차로 22명의 카렌족 난민이 입국했으며 11월에는 2차로 34명이 입국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문이나 문제가 많은 취급 혹은 형벌로 인해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자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에 근거한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994년 이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18,854명 가운데 995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됐다. 해당 연도 말에 약 4,750건의 신청이 심사를 받고 있었다. 관련 규정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지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난민과에 따르면 2013년에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난민 신청이 300 퍼센트 가까이 급증한 까닭에 신청 처리에 평균 16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정부는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망명 희망자가 최장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도 상반기에 동 센터에 수용된 인원은 36명이었다.

2014년에 정부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통상적인 난민 지위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리아 국적자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6월 현재 약 92명의 시리아 국적자가 망명을 신청했다.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95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리아 국적자가 차지했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국 그리고 일부 버마 난민이 포함됐다.

### 무국적자

법무부는 6월 현재 175명의 무국적자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그 중 상당수는 귀화한 후에도 외국 국적을 유지한 경우였다. 한국의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국적 상태로 남게 된다. 일부는 무국적자의 여행 서류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였으며, 귀화자가 결혼 사기나 서류 위조 혐의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 탈북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불법체류자거나 무국적자 신분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중국 국적과 탈북자 지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결국에는 국적을 취득하고 탈북자 대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식 탈북자에게 부여되는 금전적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탈북자는 무국적자 자녀를 중국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가혹행위와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 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공서나 자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비정부기구의 한 관측자는 2,000~3,000명의 무국적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비밀투표로 치뤄지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

최근 선거: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과 보선 그리고 2012년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것이 관측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였다.

6월에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Change 2016)와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 및 실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시민네트워크가 특정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주도했으며 법률 규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이어 실시됐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스트 10 인 후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8월에 경찰은 총선시민네트워크 실무자 22 명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모두 10 월에 기소됐으며 11 월 현재 공판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정당과 정치 참여: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보 교환 그리고 선거운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여성이나 소수자의 투표, 공직 선거 출마, 선거 감시, 기타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리핀계 한국인 국회의원 이 자스민이 4 월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직 정치인 중에는 소수민족 출신이 전무했다.

####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률은 공직자 부패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체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간혹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당해 연도 중에 다수의 공직자 부패 사건이 보고됐다.

9 월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사 종사자가 3 만원(26 달러)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 만원(43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 정부가 단행한 부패 방지 조치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조치로 평가됐다.

부패: 법무부는 2015 년 1~8 월에 공직자가 연루된 641 건의 부패 사건을 보고했다. 당해 연도 중에 5 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또는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기소됐다.

7 월에는 진경준이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로부터 9 억 5 천만 원(818,300 달러) 이상의 현금과 주식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기소된 역대 최고위 검찰 공직자로 기록됐다. 진경준은 김정주로부터 가족 여행 비용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진경준은 해임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과 수뢰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인 최순실은 사기, 협박,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협박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중범 역시 최순실에게 조력했다는 유사한 혐의로 11월에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지인이자 최측근인 최순실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심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집회(제 2.b 절 ‘집회의 자유’ 참조)가 촉발됐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회는 이 추문을 근거로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 표 반대 56 표 기권 6 표로 가결했다.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2017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하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8,613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월에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불법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했다. 또한, 아내 명의의 회사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아들이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을 둘러싼 추문이 확산되자 10월에 청와대 비서관 8명과 동반 사퇴했다.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존재하며 동법은 효과적으로 시행됐다.

## 제 5 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다소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부 대형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산별 노조는 정부가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판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제 3 절 ‘선거 및 정치 참여’ 및 제 7.a 절 참조).

정부 인권기구: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인력이 부족하며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6월 5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5,701 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으며 4,643 건이 처리되었다. 국가보안법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음부즈맨 업무는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각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 여성

---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과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에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강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하 3 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강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사례들도 있었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 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6,0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에 불응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과 2 천만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 치료 및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5 년도 통계(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45.6 퍼센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수치는 이보다 높은 53.3 퍼센트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8 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폭력 핫라인 전화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014 년과 비교하여 2015 년에 15.6 퍼센트 증가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동거인의 폭력 신고 건수는 31.7 퍼센트 증가했다.

약 21,270 쌍의 부부가 외국인 배우자와 살고 있었으며 그 중 69 퍼센트는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였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여성긴급전화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17,950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 중 266 명은 보호시설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란 명칭의 통합지원센터에 재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및 치료, 사건 조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7 월 현재, 전국에 해바라기센터 36 곳과 100 개의 소규모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시설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가 24 시간 근무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그들의 10 세 이상의 자녀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관리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핫라인 상담전화를 유지했다. 정부는 상담, 취업,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초·중등학교와 관공서에서 실시되었다.

1 월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의결했다. 경찰청 산하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전담 경관 240 명과 전국 251 개 경찰서를 포괄하는 여성청소년과로 확대 개편됐다. 5 월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11 월까지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국의 시·도 경찰청은 5 월에 발생한 여성혐오자 남성에 의한 강남역 화장실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6 월부터 8 월까지 3 개월 동안 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을 시행했다. 경찰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용 긴급신고 앱을 운영하고 공공 장소에 감시카메라와 가로등, 비상벨을 설치했다.

법률은 판사 또는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반기에 10 건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집행됐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제 7.d 절 참조). 경찰청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연도에 다수의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출산권: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들의 생식 건강을 관리하며 그러한 결정을 차별과 강압, 폭력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낙태로 인한 합병증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응급 의료 체계,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피임과 모성 보건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OECD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14 년도의 경우 남녀간 급여 차이는 36.6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 7.d 절 참조).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여성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아동

---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5 월에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미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리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정된 이 법은 11 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년도의 경우 아동 학대 사건이 2014 년도와 비교하여 16.8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4 년 180 건에서 2015 년 331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60 개 시설과 53 개 쉼터를 운영하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정부는 아동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24 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1 월, 2 월, 3 월에 발생하여 세간을 이목을 집중시킨 아동 살해 사건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중대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당해 연도 중에 언론에 보도됐다. 8 월에는 7 세이던 아들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30 년형과 20 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두 사람은 딸도 학대했으며 2012 년 10 월에 아들을 살해한 이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18 세이다. 강제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 세이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아동은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매매와 상업적 성적착취에 취약하다. 특히 일부 가출 소녀들이 성매매 대상이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19 세 미성년자 강간죄는 5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에 추가하여,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위해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4 년 1,161 건에서 2015 년 1,118 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아동유괴: 한국은 ‘1980 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legal/compliance.html](http://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legal/compliance.html)) 참조.

---

##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

##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http://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

##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비행기 여행 및 기타 교통수단, 건강권, 재판제도,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1월에 시행되어 경찰 조사 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상반기에 512 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보고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25,840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및 개인 소유 건물과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장애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개 권역별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를 운영했다.

비자발적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2013년의 경우 전체 환자의 75.9 퍼센트가 비자발적 강제입원 환자였으며 이 중 63.5 퍼센트가 환자 가족에 의한 입원이었다. 1월에 헌법재판소가 비자발적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5월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된다.

8 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불과 10 마일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축사에서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강요받았던 지적장애인 남성이 가족과 상봉했다. 소장수의 핏에 축사로 유인된 고영수 씨는 19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창문도 없는 창고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7월에 인근 공장으로 탈출한 고영수 씨를 발견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부는 형사 재판에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충청북도 도청은 강제노역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13,776 명의 행방을 추적했다. 도청은 그 중 10 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강제노역이 의심되는 17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에 27건 모두를 이첩했다.

정부는 대상자로 등록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지자체는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연금을 직접 지급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제도가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더 부유한 친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며 3~17세 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공·사립 학교, 어린이집,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을 위한 설비와 기타 자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일례로, 일선 학교들은 장애 아동의 야외 활동을 돕는 보조교사를 배치했다.

경찰청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장애인 성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하고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집중 조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중의 인식이 확대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대두된 것으로 해석했다.

## 소수 국민/인종/민족

---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5천 만의 한국에는 7 월을 기준으로 218 만명(20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종합적인 차별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행해지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6 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10 건의 민족 및 인종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17 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 56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3.7 퍼센트는 직장에서, 27 퍼센트는 거리에서, 18 퍼센트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 월에 한 주점은 내국인 손님만을 받는다는 핑계를 내걸고 외국인 여성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 사례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았으나 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업소가 이와 유사하게 공공연한 인종차별 핑계를 게시하고 있었다. 문제의 주점 관계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외국인 여성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7 월에는 한 중년 남성이 경기도의 어느 전철역에서 버마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구타했다. 이 남성은 버마인의 안면을 수 차례 가격하면서 서로 어깨를 부딪혔을 때 ‘왓(what)’이라는 불손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3 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민 가정의 아동들이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은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와 장애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외모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제 7.e 절 참조)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LGBTI(성소수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LGBTI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반기에 그러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이 2 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LGBTI 를 상대로 행해진 폭력 사건은 알려진 바 없지만 LGBTI 당사자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다. 군 형법 '그 밖의 성추행' 조항은 군대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7 월에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6 월에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역대 최대 인원인 5 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삼엄한 경계하에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나 행사장 주변에서는 LGBTI 반대 시위자들의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일부 연예인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텔레비전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동성애 관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LGBTI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이나 법조인, 인권 운동가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3 월에는 국내 명문 대학들의 교수진이 LGBTI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분석하는 연구 집단을 구성했다.

##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연예, 스포츠 혹은 기타 쇼 산업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90 일 이상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E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 운동 목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된다.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2015년에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은 노조 지도자가 노조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노조가 자체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또는 공직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은 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해직 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은 특히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통신, 수도, 기타 공익사업, 병원 등과 같은 사업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법률에 의해 필수공익사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의 50 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측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지정한 인원은 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은 일부 특수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로 정하고 있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법률에 의해 파업이 금지된다.

법률은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축소나 정리해고 같은 경영권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파업 절차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보장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에 추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명령을 무시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 혹은 무시(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하거나 불법 직장폐쇄(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8,610 달러) 이하의 벌금)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43,07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파업을 억제할 목적으로 형사 처벌을 비롯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등 과도하게 광범위한 형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6월 보고서에서 사용자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노조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한 간섭과 관련된 다수의 우려 사항들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도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제 1.d 절 참조)로 인해 7월에 한상균 위원장에게 대부분 업무방해와 관련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430 달러)이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한 위원장 개인에게 경찰 76명이 입은 부상, 경찰 3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 43대와 찢어진 제복 및 조끼를 포함하여 장비 138점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 위원장은 64,000명 이상이 참가한 이 집회로 인해 10월 현재 경찰에 수감된 노조 지도자 6명 가운데 1명이었다.

비정부기구와 노동계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노조 집회를 주도한 죄목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진보 성향의 언론은 한 위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집회 주도자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량”이라고 보도했다. 1월에 방한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갈수록 퇴행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6월 보고서에서 사용자에 의한 반노조 행위의 예로 사용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노조의 결성, 조합원에 대한 감시, 위협, 부당한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노조 와해 시도,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 하도급계약과 조합원 해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자 및 조합원 해고, 노조 지도자의 의욕을 꺾기 위한 한직 발령 등을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권리를 잠식하는 방법을 자문받기 위해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가 건설부문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을 강요하거나 완성차업체가 노조 가입 근로자를 차별한 사례 등 당해 연도 중에 보고된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9 월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약 1,200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설립이 허가된 첫 해에 조직 캠페인과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송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노조 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다른 중범죄의 형량과 비례했다. 형법은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월에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조건에서 19 년간 축사 강제노역을 강요한 부부가 기소됐다(제 6 절 ‘장애인’ 참조).

일부 근로자들이 강제노역을 강요받는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드물다’고 보고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 센터는 불법으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여권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권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착취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제 7.d 절 참조)이 강제노역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http://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허가가 없는 경우 야간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리적 혹은 건강상의 관점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업종의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18 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천만 원(17,23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헌법과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다. 법률은 성별이나 종교 혹은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생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법률은 성별, 연령, 신앙,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 여부, 임신, 국적, 병력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피부색, 정치적 성향, 언어, 에이즈 또는 기타 전염성 질환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정부 부처 3 퍼센트, 공공기관 2.3~3 퍼센트, 민간 기업 2.3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이 면제된다.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조항들을 강제로 집행하는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률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혹은 출산 직후의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의 CEO 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5,84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8,61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고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5백만 원(4,31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 원(8,610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성희롱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100 인 미만을 고용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별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710,000~1,166,000 원(612~1,005 달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 의무 비율의 50 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HIV/AIDS 보균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차별이 행해졌다. 특정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HIV 차별이 지속됐다.

채용 시와 고용 기간 중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됐다. 남녀간 임금 격차가 유지됐으며 여성 근로자의 상당 비율이 저임금 비숙련 계약직에 종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 년 한 해 동안 약 25,000 명의 여성이 모성보호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여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 3 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3 천만 원(25,5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1 천만 원(8,5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률의 실제 적용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으며 여성가족부는 모성보호제도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150 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9 월 현재, 여성 287,000 명이 구직 시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 중 11,000 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112,000 명 이상의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은 뒤 일자리를 얻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 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 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물품 입찰 적격 심사 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 근로자 1,000 인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CEO 스코어에서 9 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 개 공기업에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1~6 월에 직장 내 성희롱이 164 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약 16,000 곳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관리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지조치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지시한다.

최저임금법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4 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장애를 지닌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5 월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한 633 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근무시간 조정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5~64 세 장애인 139 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부기구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차별의 위협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제 7.e 절 참조).

상당수 외국인근로자는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최장 체재 가능 기간은 4 년 10 개월로 이는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5 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자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착취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제 7.b 절 및 제 7.e 절 참조).

법률은 비공식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근로자(“파견 근로자”로 불린다)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5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은 고용 형태를 근거로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고용 현장에서는 차별이 지속됐다.

2 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률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용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가 모두 반발했다. 비정부기구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차별의 위협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 e. 최저 근로 조건

당해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 원(5.20 달러)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 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은 4 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관련 통계가 수집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15 년의 경우 1,481 개

사업장에서 2,037 건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최저임금 규정은 연안해역에서 운영하는 20 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은 사업주에게 4 시간 근무제의 경우 30 분, 8 시간 근무제의 경우 1 시간을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2 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주 1 일 휴가 규정 등의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5 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12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 의해 근로자는 고용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정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86,130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간외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8,705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17,409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9 월 현재 전국 47 개 지사에 1,185 명의 일반 근로감독관과 366 명의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며 불시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 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6,647 회 이상의 산업안전 및 복지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 예방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임시직 연예홍행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경우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는 전직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의 명단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직이 어렵다. 사업주는 구직 근로자의 명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채용을 원하는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개월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 전 교육을, 전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적응 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5개 언어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9곳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법률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2014년에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명명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에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이주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수령했다. 상당수 외국인근로자는 은행 규정과 비협조적인 사용자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출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경우 법률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문화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어선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무슬림 선원들에게 계속해서 돼지고기를 식사로 제공한 사례를 인용했다.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임금에서 주거비나 식대를 차감당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계약 변경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외국인근로자의 1.55배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보고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90,129 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810 명이었다. 6 월에 울산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로 2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3 명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